

News

국민은행, 지점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 해제... "증가율 안정권"

뉴스1

국민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 조치 해제... 당초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대출 증가율이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해제 조치 이번 조치로 지점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하는 곳은 우리은행 한 곳으로 감소... 우리은행은 지난 9월부터 전세대출, 주담대 등의 한도를 월별·지점별 관리

영끌족, 이자부담 커진다... 국민·하나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5% 돌파

머니S

코픽스가 한달만에 0.26%p 급증... 2010년 관련 통계 집계한 이후 최대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최고금리 연 5% 넘어서... 11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 한국은행이 내년 1월 기준금리 1.25% 추가 인상하면 코픽스는 더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

은행 대출 사전심사 도입된다... "적정성·적합성 적용 강화"

뉴스1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일환으로 대출 신청시 본심사에 앞서 사전 심사... 차주의 상환능력을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대출 본심사 진행 12월 중 체크리스트를 확정해 전 은행권에 공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계획...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도 체크리스트 공유 계획

美 연준, 테이퍼링 속도 2배로... 내년 3회 금리인상도 예고

조선비즈

미 연준, 테이퍼링 속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 3회 금리 인상 발표...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에 대한 대응책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무리 시점을 3월쯤으로 앞당길 예정... 기준금리는 0.00~0.25% 수준으로 동결... 이르면 내년 3월 중반쯤 금리 인상할 것으로 시장 예상

당국, 보험사 사회계제도 기준 강화... 삼성생명도 긴장?

시사저널이코노미

금융당국, IFR17 아래서 부채 시가평가에 활용되는 장기선도금리를 대폭 인하할 계획... 현 5.2%에서 4.95% 또는 4.90%로 인하 검토...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도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시장금리 상승효과가 사라지면서 잉여금 감소할 가능성 때문

실손보험, 2031년 적자 112조원... 보험사 파산 우려도

보험매일

보험연구원,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 분석결과 지난 4년간의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 계속 유지시 내년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 112조 3,000억원 전망 동 시나리오라면 손해보험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 전환...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 도달하려면 보험료 연평균 19.3% 인상 필요

온라인 강자 키움증권, 비대면 신탁 진출

디지털타임스

금융위원회, 키움증권이 신청한 신탁업 변경인가 조건 승인...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온라인 방식으로 신탁영업 가능 금융당국은 그간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운용방법을 자필기재하도록 해 비대면 방식 제한... 이번 인가로 설명의무를 다할 경우 비대면 방식 신탁업 영위 가능

증권사별 '소수점 매매' 각양각색... 소비자의 선택은?

뉴스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허용으로 증권사들 발빠른 서비스 제공 중... 현재까지 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총 5곳 큰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고객 확보 창구로 향후 서비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